

“새만금추진지원단, 도의회 의결권 침해”

송성환 의원,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에 군산시 1억 분담기로 의회승인… 집행은 5000만원 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보조금과 관련해 지방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발끈하고 나섰다.



송성환 의원

지난 29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송성환 의원(전주9)은 새만금추진지원단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제출한 2016년도와 2017년도 의회 예산안 심사 첨부서류와 정산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총사업비 및 보조비율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의 문제 제기는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사업비 때문이다.

송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도지사는 회계연도 5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 때 첨부서류로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며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의결한 예산안과 다르게 집행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역할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고 질타했다.

실제 2016년과 2017년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예산심사자료에는 군산시는 1억원씩 분담하기로 의회 심의를 받았다.



예산안 처리 위한 교섭단체 3당 회동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당 이홍호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당 권은희,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하지만 군산시의 실제 분담률은 의회 심의와는 다르게 사업비 5,000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성환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심의와 다르게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김광수 ‘경로당 헐살 지원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7일, 정부부에 한경애 경로당에 지원되던 현행 양곡비 지원제도를 헐살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관리양곡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정부관리양곡만 구입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측면이 있어,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정부관리양곡만을 경로당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정부관리양곡 또는 일반 양곡(헐살 등)의 구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를 ‘양곡구입비’로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어르신들이 정부에서 남아도는 쌀을 경로당에 떠넘긴다는 푸념과 함께, 일부 경로당에서는 가래떡을 뽑아먹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정부는 밥을 지으면 퍼떡할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개정돼 어르신들의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농업기술원 결산추경·본예산안 심사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27일 제 348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7년 결산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농산경제위원회들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사항을 지적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학수 위원장(정읍2, 더불어민주당)은 “결산추경 예산은 통상 사업비 반납액, 잔액, 계약차액, 운영비 절감액 등의 예산을 감액을 요구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술원의 특정 부서는 1원도 반납, 감액하지 않아 예산결감 노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불용으로 만들어, 예산의 효율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만 의원은(군산1, 더불어민주당)은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위해 2018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의회의 삭감을 고려해 예산을 불풀려 과다하게 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도민들이 홈페이지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콘텐츠의 양을 늘리고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철 의원은(진안, 더불어민주당)은 “신규사업들이 도비, 시군비 포함 100%를 지원하여 시범사업으로 리스크를 고려하더라도 사업 대상자에게 특혜성 논란이 있다”, “운영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니, 대상자를 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선정하고 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부담율을 조금이라도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백경태 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신규사업들이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설명 자료에는 누락되고 별도 보고조차 하지 않아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예산 심사기능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신규사업, 쟁점예산의 경우 반드시 예산 설명 자료에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당부했다.

강용구 의원은(남원2,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인 정보지원 사업의 경우, 발행부수와 예산은 증가하였다”며, “수요가 줄어가는 사업을 관습적으로 증액 편성하는 타성행정은 지양하라”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김대중, 집권당 정책위 부의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김대중 도의원(익산1)이 11월 22일 당 최고위원 의결을 거쳐,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됐다.



김대중 도의원

김대중 도의원이 임명된 정책위원회는 집권당이 추구하는 국가 정책 입안 및 대국민 선거 공약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국민 실생활에 관련된 법률안 등 국회에 제출되는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실질적으로 당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조직이다.

김대중 도의원(정책위 부의장)은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최우선적으로 익산시민과 전라북도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가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힘 있는 집권여당의 정책위 부의장인 만큼,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으로 역량을 발휘해, 익산시민과 도민들께서 바라는 정책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소명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내 파손 건축물, 시·군 직권철거 가능해질 듯

장학수 도의원 발의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만 남아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은(국민의당, 정읍1)은 27일 주변 이웃들과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파손된 채방치되고 있는 빈집의 철거를 지원 및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를 발의, 본회의 통과만 남겨졌다.



장학수 도의원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라북도 빈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활용할 수 없는 철거 직전의 빈집들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 금년에 제정될 ‘전라북도 주변환경 피해 파손건축물 철거지원조례’를 토대로 예산지원을 통해 연차적으로 철거해 간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조례안은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3분의 1 이상 파손된 건축물이 그대로 방치되면 붕괴, 화재 등 안전상 위험이 우려되는 상태의 건축물이거나 위생상 전염병이 창궐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건축물, 그리고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주변환경을 훼손시키는 상태인 건축물 등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로 정의한다.

이를 건축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거하여 시·군이 직권철거 할 수 있도록 철거비와 보상비를 도비로 지원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조례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우의 주변환경 피해건축물이나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 공공시설용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소유자가 동의를 제출한 경우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 건축물의 철거를 넘어 공공시설의 확충을 통한 각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도 더해졌다.

전북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말 기준 전라북도의 빈집은 총 9,064동으로 이 중 30%인 2,728동은 상태가 양호하여 수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빈집의 70%인 6,336동은 활용할 수 없는 철거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법과 농어촌정비법에는 빈집 등에 대해 시장, 군수가 감정평가를 통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직권철거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지만 예산확보 곤란, 절차이행복잡, 기간소요과다, 민원발생소지 등의 이유로 최근 10년간(’08~’17년) 빈집의 직권철거 현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수 의원은 “철거대상 건축물을 철거 권고와 철거심의 등 일정절차를 밟아 행정에서 직권철거하고 그 비용을 건축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7년간이나 고민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진성 기자

자연과 사람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세계 최고의 자연생태도시, 고창군

고창군관광사슴지